

## 포스코 노동자들의 절규, “그만 죽여라”

금속, 최정우 살인기업 포스코 회장 구속 촉구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더욱 절실”



“안담합니다. 더는 산재 사망사고 문제로 이곳에 서고 싶지 않았어요.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로 동료 노동자 세 명을 잃었습니다. 지난 7월 광양 코크스공장 추락사 이후 다섯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포스코가 또 사람을 죽였습니다.”

11월 24일 오후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에서 산소 배관 작업을 하던 노동자 세 명이 폭발·화재 사고로 숨

졌다. 금속노조는 12월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살인기업 포스코 규탄, 최정우 회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포스코지회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참석해 포스코의 중대 재해 방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찬목 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장은 “2014년에 산소 배관 밸브에서 폭발이

일어나 세 명이 죽었다”라며 “사측이 당시 사고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결국 비슷한 상황의 중대 재해 사망사고가 또 터졌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찬목 노조 포스코지회장은 “2018년 사측이 1조 원이 넘는 돈을 재해 예방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최정우 회장은 중대 재해가 날 때마다 안전경영을 약속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그 많은 돈

은 도대체 어디에 들어갔는지 묻고 싶다” 라고 규탄했다. 김 지회장은 “비슷한 중대재해의 반복은 사측 안전대책이 한마디로 엉터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라고 꼬집었다.

포스코는 2018년 5월 잇단 산재 사고 발생으로 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안전 관련 분야에 3년 동안 1조 1,050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안전경영’을 내세운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포스코에서 매년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2018년 크레인 버킷 협착, 2019년 수소가스 폭발사고, 2020년 7월 추락 사고 등으로 노동자들이 죽었다.

김찬목 지회장은 “너무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안전보건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라며 “12월 1일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시작으로 노동자가 죽지 않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근로감독, 첫날부터 금속노조 지회 참여 방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체 공장을 특별근로감독한다.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등 50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리실태 전반을 감독한다. 하청업체 업무도 감독 대상이다.

이번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 노조 포스코지회·포스코 사내하청지회가 참여한다. 11월 24일 폭발사고 다음날 금속노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에 즉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감독에 주민, 금속노조 간부, 노조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고, 노조 포스코지회 두 명과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한 명으로 참여를 제한했다.

노조 포스코지회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첫날부터 포스코는 금속노조 지회 활동을 방해했다. 노동부와 금속노조는 노조 포스코지회장과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 등 금속노조 참석 아래 사고 브리핑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포스코 관리자들은 12월 1일 브리핑 현장에 참석하려는 두 지회장을 코로나 19 확산 방지 운운하며 막아섰다. 한국노총 포스코노조는 인원 제한은커녕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포스코 중대 재해 때마다 노동부가 감독을 벌이지만

보여주기식이었고, ‘요란한 빈 수레’에 불과했다” 라며 “노동부는 감독 시늉하지 말고, 사망 사고 근본 원인을 파헤쳐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포스코 죽음의 행렬을 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더 절실해졌다. 이 법의 목적은 사용자 구속이 아니다. 노동자를 살리자는 법이다” 라며 “산재 사망사고는 기업살인이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라고 호소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 재차 촉구한다. 포스코가 노동자 목숨값으로 철판 만드는 짓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라며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연임하겠다고 나섰는데, 안 될 말이다. 최정우를 구속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연내 입법하라” 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과 함께 포스코 노동자 산재사망 책임자인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구속을 요구했다. 노조는 ▲근본 안전대책 수립 ▲위험의 외주화 중단 ▲포스코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하며, 금속노조와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 “이제 마지막, 김진숙이 복직할 차례”

시민사회·종교계 복직 촉구 기자회견 … “한진중 보상 핑계 중단, 민주노조 운동 예우하라”



금속노조 김진숙 조합원 정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사회가 다시 한번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과 심진호 한진중공업지회장은 11월 25일부터 ‘김진숙 복직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태일재단은 12월 1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김진숙 복직 촉구 시민사회 각계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록 코로나 19로 직접 참여하지 못했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등 모두 89개 단체 152명이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리고 함께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두 번이나 복직을 권고했고, 부산시의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만장일치로 김진숙의 복직을 촉구했다” 라면서 “한진중공업 경영진은

매각을 핑계로 배임 운운하며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라고 규탄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부당해고자 복직과 정당한 보상에 관한 노사 자율 합의는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라며 한진중공업에 김진숙 조합원의 조속한 복직을 촉구했다.

이병모 한진중공업 대표는 지난 10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김진숙의 복직은 퇴직금 지급 등에 따른 업무상 배임 논란과 급여 동결 등으로 고통을 겪는 다른 직원 정서를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송경용 성공회 신부는 기자회견에서 “김진숙의 복직은 지난 35년 동안 법이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막혀왔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잘못된 법을 바로 잡아 김진숙의 명예를 회복하고, 하루라도 일터에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라고 호소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김진숙의 한진중공업은 전태일의 평화시장이었다. 한진중공업에서 정리해고가 벌어질 때마다 김진숙은 매번 싸웠지만, 김진숙은 매번 그리운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라며 복직을 촉구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김진숙 복직에 대해 사측이 복직에 따른 보상이 배임으로 결린다고 지껄인다. 복직은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예우다” 라고 강조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조 운동은 짓밟혀도 다시 꽃을 피우는 들꽃과 같다. 들꽃의 뿌리처럼 김진숙 조합원은 민주노조 운동의 뿌리다. 금속노조는 김진숙 동지가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으로서 퇴직하도록 망설이지 않고 투쟁하겠다” 라고 결의했다.